

“외국어 간판 너무 어려워요”… 한글 표기 없어 불편

식당·아파트 외국·외래어 난무
어린이·노인 등 소통막아 혼란
지난달 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한글 사용 활성화 노력해야”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는 578돌 한글 날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여전히 외국어와 외래어 표기가 남용되고 있다. 외국어 표기가 익숙지 않은 노인과 어린이에게는 원활한 소통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오후 찾은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변화가인 만큼 수많은 점포가 밀집해 있지만, 상당수 가게의 간판에서 한글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가게 앞에 나와 있는 홍보 입간판과 문에 부착돼 영업시간을 알리는 안내문도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도배돼 있었다. 일부 매장의 경우 메뉴판마저 영어로 기재돼 있기도 했다.

외국어를 모르는 시민의 경우에는 가게 명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영업을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한글을 병기(併記)하지 않고 외국어만 표기하는 간판과 광고물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



7일 광주 도심 변화가 음식점 곳곳에 외국어 간판이 부착돼 있다.

시해야 한다.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광고물의 면적이 5㎡ 미만이거나 건물 3층 이하에 설치된 간판은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자치구의 관리·규제가 어렵다.

또 상표 자체가 특허청에 등록된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경우에는 외국어만 적힌

간판을 걸더라도 위법사항이 아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거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외래어 이름 마케팅이 유행하면서 신축 주거단지의 이름을 지역명과 혼합해 ‘XXX파크’, ‘XXX캐슬’ 등으로 길게 짓거나, 이미 있던 이름마저도 외래어로 바꿔서 다는 풍조도 생기고 있다. 아파트 이름이 길고 어려워 시어머니도 헛갈려 못 찾아온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과 어린

이 등 외국·외래어 표기가 익숙지 않은 이들에게 소통을 막는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황모(76)씨는 “최근 지인과 모임을 위해 광주 시내 식당가를 찾았다가 한글 간판이 없어 식당을 찾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메뉴판에도 한글 설명이 없고 영 어만 적혀 있어 진땀을 뻘 적도 있다”며 “남녀노소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한글 간판으로 바꾸거나, 한글도 함께 적어 소외되는

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지역 국회의원의 ‘한글 간판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청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광주 각화초등학교와 빛고을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원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갑) 의원에게 “외국어로 된 간판 등이 많아 불편하다”, “한글로 된 예쁜 간판을 많이 보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보냈고,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외국어 간판의 크기와 층수 기준은 높이와 처별 수위를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계도의 효율성은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해 간판의 한글 표기가 정착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취지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과 기업 차원에서 한글 사용 활성화를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현수 호남대 한국어학과 교수는 “우리의 언어와 글은 의사소통 기능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얼과 문화를 담고 있다”며 “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생활 속 외국어와 외래어 등이 난무해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한 우리 언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지자체와 언론, 기업 차원에서 우리말 간판과 상품명 등 한글과 우리 말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살인죄 출소 5년 만에 또 여친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살인죄 복역 후 출소한 지 5년 만에 여 자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63)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구례군의 여자친구 A씨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고, 인근 논두렁에서 둔기로 때려 제압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김씨는 4년간 교제 하던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이에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피해자의 자택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한 A씨는 5시간 동안 귀

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폭행을 휘둘렀고 도망치려는 A씨의 뒤를 쫓아가 살인까지 저질렀다.

특히 김씨는 2008년 제주 서귀포시에서 동거인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19년 출소해 5년여 만에 또 다시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날 김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퇴정하며 재판부에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가 다시 법정에 불려와 재판장의 경고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복역하고 5년 만에 다시 범행해 사회로 나갈 경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술 취해 벌인 우발 범행에 불과하다며 책임 회피 태도까지 보이는 점, 인명 경시 태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동호회원 숙여 3억7000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을 숙여 3억 7000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6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7일 사기 혐의로 40대 중반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투자금 3억7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등산 동호회 등 각기 다른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4명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장성급 장교’라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있다고 속여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유형비 등으로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입금한 후 연락이 뜸해진 A씨를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상이 기자

‘뇌물수수·부당 대출’ 광주 모 저축은행장·브로커 기소

138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 의혹

광주의 한 저축은행 간부와 브로커가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138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수재)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A씨와 배임 혐의를 받는 은행

관계자 B씨,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C씨, 중재 등의 혐의를 받는 D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근무 중인 은행에서 여러 법인 명의의 총 138억원을 부실 대출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몇몇 업체와 관계자들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도 받고 있다. 브로커 역할을 한 C씨는 대출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은행장인 A씨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부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판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4일께 열 계획이다.

민현기 기자

동료 숙소에 불지른 뒤 흥기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23년

아파트 두 차례 방화 시도

직장 동료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동료의 아파트에 두 차례 불을 지르고 흥기로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7일 살인·현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모(45)씨의 항소심에서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5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A(26)씨의 숙소에 불을 지르고 흥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과 흥기를 발견, 약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조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자신보다 어린 동료가 말을 함부로 한다며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아파트

에 두 차례 방화했다. 하지만 불이 원하는 대로 옮겨붙지 않아 흥기를 들고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이 극도로 불량하며 다중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 두 차례 불을 지르고도 또다시 흥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호남고속도로서 사고 수습하던 60대 차에 치여 사망

갯길에 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사고를 수습하던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

7일 전남경찰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께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A

(62)씨가 몰던 승합차가 갯길에 정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 충돌의 여파로 승합차의 우측 측면 문이 도로 2차선에 떨어졌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도로에 나간 A씨는 운전자 B(34)씨가 몰던 SUV에 치이면서 2차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직

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3대 차량의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덤프트럭은 브레이크가 고장나 갯길에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상이 기자